

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지키고, 국가 경쟁력 높인다

- 근로조건 개선, 선원 양성 활성화 등을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 (국적선원 수) 58,818명(2000년) → 38,758명(2010년) → 31,867명(2022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인력을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 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하여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40)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745)

[붙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요약)

I 추진배경

□ 국적선원 수 '00년 이후 지속 감소, 고령화 심각(60세 이상 비중 44%)

* (국적선원수/비중): ('00) 5.9만명/88.5% → ('10) 3.9만명/68.6% → ('22) 3.2만명/53.0%

○ 과거 고소득·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저하, 신규인력 대부분 5년내 이직

* 해양계열 대학, 해사고 등 통해 취업한 해기사 중 78%는 5년 내 육상직으로 이직

⇒ 선원 부족으로 10년 뒤 외항상선 절반 이상 운항 차질 우려

* 현 추세 지속시 '32년에 외항상선 1,500여척 중 600여척만 운항可(해기사협회, '22)

◇ 국적 선원 인력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및 **소득·복지 증진**, **교육훈련**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

II 세부 추진과제

1. 근로조건 개선

□ **(근로환경 개선) 휴식권 및 가족·사회와의 연결성 보장**

○ (승선기간·휴가) 외항상선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현재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노사정 협의 진행中)

○ (근무환경) 선내 초고속인터넷 구축, 원격의료 장비 설치 확대

○ (법적권리) 근로기준법상 인권보호 장치들을 「선원법」에 규정

*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 **(실질소득 증대) 공제·세제 혜택 등 경제적 유인책 확대**

○ (공제제도 신설) 선원 자산형성·복지 위해 전문직군에 대한 공제 신설 추진 (자체 재원 등), 청년·초급 내항상선 선원 적립형 공제 도입案 연구·논의

○ (비과세 확대)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 (주택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 포함

2. 인력공급 확대

☐ (복지 확충) 선원 복지 지원 위한 기금·공제 신설 등

- (기금 신설) 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 신규 조성
- (국가필수선박) 국적 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 지원 확대(현재 외항상선 88척) 검토
- *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통상 8명)되며, 정부가 임금 추가 부담(2명)을 보상

☐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 경로 구축, 해기인력 통합 관리

- (경력관리) 해상-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경로 구축
- (장기승선 유도)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선·기관장까지 승진기간 단축(통상 현재 30대중반 → 30대초반)
- * (예시) 3급(해양대 졸업 시 초기 직급)에서 1급까지 소요기간: 약 10년 → 7년 이하로 단축

☐ (외국인선원 공급) 외국인 장학생 도입 지원, 숙련인력 확대 추진

3. 교육·양성 강화

☐ (양성경로 확충) 면허-취업 연계 교육과정 강화, 승선 복귀 지원

- 면허-취업 연계 집중 교육과정을 확충(오션폴리텍 등) 하고, 경력단절後 면허 재취득 위한 교육기간 단축(최대 5개월→1개월)

☐ (역량 강화) 운항실습 확대, 수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선

- 교육기관(해사고 및 오션폴리텍)의 운항 실습 확대, '해사영어 상시 학습 플랫폼' 구축 및 무료 제공

☐ (차세대 교육) 실습선 신규건조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도입 등

- 대형(1만톤급) 상선실습선 및 어선실습선(3천톤급) 신규 건조 추진, 예인선('23) 및 연안선('24)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도입('23~'24)